



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미국 : 미시건주, '일할 권리 법안(right to work law)' 통과

2012년 12월 11일, 미시건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을 함에 따라, 미시건주는 미국에서 24번째로, 2012년 들어서는 2번째로 미국에서 '일할 권리 법안'을 통과시킨 주가 되었다. 이 법안이 발효되는 2013년 4월부터 미시건주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도 노동자가 노조에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유니온숍(unionshop)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자들은 노조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기존에 체결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2011년 체결한 단협이 종료되는 2015년 9월 이후에 이를 적용받게 된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이 법안 덕분에 사업주들이 미시건주로 이주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노조가 조합비를 내지 않는 노동자들까지 대표해야 하는 프리라이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임금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은 '돈을 덜 받고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일할 권리 법안은 미국 남부지역에서는 흔하지

만, 미국 노조운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건주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특히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에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은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처한 이후 2007년과 2011년 양보교섭을 통해 희생을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조합비를 납부받는 것도 어려워져서 정치적 입지도 줄어들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유치해야 할 책임도 지게 되었다.

미시건주는 노조 조직률이 17.5%(2011년)로 미국에서 5번째로 높다. 698개의 자동차 조립, 부품 제조업체들이 있고, 2012년 10월 현재 138,200명의 노동자가 자동차산업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 노동자의 18%에 해당한다.

- 출처: 1. 이코노미스트, 2012년 12월 15일자, 'Now Michigan, Anti-union legislation in the home of the car industry'
- 2. 로이터, 2012년 12월 7일자, 'Michigan "right-to-work" law exempts existing union contracts'



유럽

스웨덴 : 스칸디나비아 항공 구조조정 관련 단체협약 체결

경영난을 겪어온 스칸디나비아 항공(SAS)은 2012년 11월 18일 8개 노조와 30억 크로나 정도의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합의하였으며, 채권단으로부터의 대출을 기존 31억에서 35억 크로나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2015년 3월로 연장했다.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사합의가 대출연장의 전제조건이었는데, 주요 내용은 800여 명의 인력삭감과 15%의 임금삭감을 통해 비용절감을 한다는 것이며, 아웃소싱을 통해 전체 15,000명의 인력을 9,000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스칸디나비아 항공(SAS)의 최대 주주(스웨덴 정부, 노르웨이 정부, 덴마크 정부가 각각 지분을 21.3%, 14.3%, 14.3%보유)이자 채무보증자인 스웨덴 정부가 근로자들의 임금삭감에 크게 개입했다. 이에 대해 스웨덴에서는 매우 드물게 학계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이는 스웨덴 단체교섭모델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린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Anders Kjellberg에 따르면, 이번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제안한 구조조정안에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 ① 스웨덴에서 1930년 이후 최초로 임금삭감이 이루어졌고, ② 노조에 교섭의 여지를 주지 않은 최종안이였으며, ③ 스웨덴 정부의 개입 수준이 예외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Kjellberg 교수는 이번

교섭에서 사측은 파산위험을 이유로 들어 근로시간 연장, 퇴직연령 상향, 일부 근로자 그룹에는 임금 하락 등의 근로조건 악화를 요구하는 최종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938년 이래로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협의해 오고 있는 스웨덴 단체교섭모델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웨덴 산업경제연구소 책임자이자 교수인 Magnus Henrekson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스웨덴 모델과 상충되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스웨덴 노총 위원장은 이번 스칸디나비아 항공 사측의 태도를 매우 비판하였는데, 단체협약을 후퇴시키느니 작업장을 폐쇄하는 편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후에 발생할 아래로 향한 질주(face to the bottom)를 우려했다. 스웨덴 전문직노조 위원장도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스웨덴의 전통의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조종사연합은 금융시장부 장관 Peter Norman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스칸디나비아 항공 사측이 스웨덴 모델에서 이탈한 사실을 옹호한 것이냐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Norman 장관은 언론 기사를 통해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새로운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 데 국회의 굳은 지지가 있었다고 답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성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였다.

- 출처: 1. 월스트리트 저널, 2012년 12월 12일자, 'Scandinavian Airline SAS Sets Restructuring,'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389470457>

8114381287246520.html

- 2. Eironline, 2012년 12월 21일자, 'Airline downgrades collective agreement,'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12/11/articles/se1211019i.htm>

영국 : 노동당 “집권하면 ‘생활임금’ 적용 확대”

노동당 당수인 에드 밀리반트는 다음 선거에서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다수의 근로자들이 최소 시간당 7.45파운드(한화 약 1만 2,900원)의 '생활임금(living wage)'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노동당은 정책검토 과정의 하나로 생활임금을 '새로운 규범'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려 중인데,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다수의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정부에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노동당의 판단이다.

노동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곳으로 대상이 제한되고,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그 명단이 공개되는(name and shame)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 현 연립정부는 생활임금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노동당의 계획, 즉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을 이런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EU 조달관련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에드 밀리반트는 “완전히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미 몇몇 지방정부가 이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어 밀리반트는 “1990년대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 지난 노동당 정부의 뛰어난 업적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생활임금이 우리 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지역과 런던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직접 고용한 직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정부는 최근 발표된 생활임금 인상분을 2013년 4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3,3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수당 인사인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 역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인상된 런던 생활임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보리스 존슨 시장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기본 생활비를 반영해 산정되고, 사용자들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만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생활임금 파운데이션과 시티즌 UK가 주도한 캠페인의 결과다. 현재 생활임금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제도이고, 임금요율은 매년 업데이트된다. 러프버러대학 사회정책연구센터는 런던 이외 지역에 사는 근로자, 런던시는 런던 내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계산한다. 최근 발표된 생활임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25펜스 인상된 7.45파운드(런던 이외 지역, 한화 약 1만 2,900원)와 8.55파운드(런던 내, 한화 약 1만 4,800원)로 책정되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 즉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저임금보다 높다. 현재 21세 이상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6.19파운드(한화 약 1만 700원)이고, 18~20세는 4.98파운드(한화 약 8,600원), 16~17세는 3.68파운드(한화 약 6,400원)이다.

• 출처: BBC 인터넷판, 2012년 11월 5일자, 'Living wage: Ed Miliband pledge over government contracts'

영국 : NHS Direct 콜센터 폐쇄에 따라 일자리 감소 예상

NHS의 전화 상담 창구인 NHS Direct가 대부분의 콜센터를 폐쇄함에 따라 수백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노조 대표가 주장하였다.

노동조합인 Unison의 대표는 30개 중 24개의 콜센터가 문을 닫을 것이며, 이에 따라 간호사를 포함한 1,5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NHS Direct의 최고책임자는 NHS의 비응급창구인 111번호를 여전히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콜센터 폐쇄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Unison의 NHS Direct 담당 부의장인 산드라 맥스웰은 간호사와 NHS 전문직들이 잉여인력으로 분류되어 버렸다면 NHS는 111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 그들의 전문 기술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 노조의 NHS Direct 담당자인 마이클 워커는 보건부 장관이 개입하여 이를 당

장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였다.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며 이것은 환자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Unison은 브리스톨, 셰필드, 웨이크필드, 노팅엄, 헐, 스타포드, 첼스포트 그리고 뉴캐슬에 있는 NHS Direct 센터가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Unison의 대변인은 이들 콜센터가 대체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해고된 근로자들의 향후 직업 전망은 매우 어둡다고 덧붙였다.

NHS Direct의 대변인은 111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서 경매로 계약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대상은 999 긴급서비스가 아닌 비응급 111 서비스이다. 그 대변인은 또한 111 서비스는 30개의 콜센터 중 6개에서만 제공될 예정이지만, 이것이 다른 콜센터를 폐쇄한다는 뜻은 아니라

고 주장하였다.

현재 NHS Direct는 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NHS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매년 NHS Direct는 420만 건의 건강문제, 진료, 의료 지식에 관한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보건 전문가, 간호사, 그리고 치과 진료 담당 어드바이저들이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일년 내내 이용 가능하다.

NHS Direct의 최고책임자인 닉 채프만은 언론에 나온 콜센터 폐쇄에 관한 결정은 잘못된 보도라며 아직 폐쇄와 관련하여 정해진 것은 없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런던, 미들브룩, 더들리, 엑시터, 밀튼 케인즈, 칼리슬 등 6개 지역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콜센터 근무가 아닌 재택근무(home working)가 간호사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왕립간호학교의 최고책임자인 피터 카터 박사는 NHS Direct 서비스를 중단하고 111 상담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비용을 줄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중요한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에 111 서비스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NHS 111 서비스로 초회 상담을 하고 나서 엠블런스의 이용 빈도가 더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도리어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잘못된 경제(false economy)라고 비판받고 있다.

- 출처: 가디언, 2012년 11월 9일자, 'NHS Direct to close most call centres, cutting hundreds of jobs, says union'

프랑스 : 학위 소지 청년층의 고용시장 악화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다. 작년 10월 3일 발표된 관리직 고용협회인 APEC (Association Pour l'Emploi des Cadres)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기관을 떠난 구직자의 올해 취업률은 71%로 2009년도 64%에 비해 증가하였다. 구직활동 기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균 2개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열악해진 노동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학생들 중 60%가 학위 취득 이전에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규직 비율도 2009년(47%)에 비해 상승한 56%였지만, 정규직 일자리

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늘어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론 2012년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채용 비중이 감소한 탓이며, 또 다른 면에서는 기업이 2009년 신규채용 중단 이후 올해 더 많은 고객 끌어안기(Fidélisation)로 방향을 선회한 탓이기도 하다. 이러한 호전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APEC은 학위 소지 청년층의 고용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경제 상황에 따라 이들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하반기에 1인 이상의 관리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가진 기업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가 근속연수를 보장해 주지 못하다

지난 9월 고용센터(Pôle Emploi)에 등록된 50세 이상 장년층 실업자가 2.9% 증가했다. 이는 평균인 1.9%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Syntec Recrutement(민간 채용알선기관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년층들의 실업 문제에 있어서, 이들의 학위가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1일, Syntec에 가입된 기관들은 장년층 관리직 구직자 중 천 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상담원 및 인사관리 직원과의 한 시간 동안의 무료 면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1천 명 중 기술전문학교 학위 소지자, 즉 의학 학위,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학위 소지자들의 비중이 지난해 11.9%에서 올해 15.9%로 증가했다.

이 기관은 “학위와 경험만으로 직업활동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10만여 명의 장년층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비관적인 경제 상황이라는 제약 조건하에서, 2012년 9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퇴직연령 개혁안이 장년층들의 직업활동의 증가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출처: 1. Le Monde, 2012년 10월 18일자, 'L'embauche des jeunes diplômés ralentit'
- 2. Le Monde, 2012년 10월 25일자, 'Le diplôme ne compense plus le nombre des années'

프랑스 : 노동부 장관, 불법 저임금근로에 개입

미셸 사팡 노동부 장관은 단호했다. 그는 지난 11월 13일 합법적인 방식으로 프랑스로 파견된 유럽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텔레비전 채널 2번을 통해, “프랑스 땅에서 프랑스 노동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프랑스에서 폴란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사례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일간지 <르 파리지앵(Le Parisien)>은 노동부의 비공개 자료에 기반하여 현재 프랑스에는 30만 명이 넘는 저임금 유럽 근로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본국의 기업에 의해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수치는 지난 2010년 11만 명이었으며, 이는 2006년에 비해 세 배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수는 22만 명에서 33만 명 사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년 사이 동유럽 국가에서 온 거주자들 이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근로자들이 자국의 경제위기 때문에 이주해 온 것이다.

2007년 시행령 이후, 프랑스에서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비스 용역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따르

면 이 기업들이 프랑스 노동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임금에 있어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수치화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는 이미 드러난 현상이며, 현재에도 프랑스 국경 주변, 건설 현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있으며, 이미 몇몇 사례들의 진상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적발되기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이러한 불법 노동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이를 이용하는 것이 프랑스 기업

들”이라며,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토론했다. 또한 그는 이 문제가 노동비용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프랑스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유럽의 기업들은 사회보장분담금의 의무는 본국에서 이행하지만, 노동법의 경우는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출처: 1. Le Monde, 2012년 11월 13일자, ‘Michel Sapin s’engage à lutter contre les salaires à prix cassés’
- 2. Le Parisien, 2012년 11월 13일자, ‘Plus de 300 000 salariés étrangers low-cost en France’

프랑스 : 루이 갈로아(Louis Gallois) ‘경쟁력’ 보고서 발표

지난 11월 5일, ‘프랑스 산업의 경쟁력(확보)을 위한 협약(Pacte pour la compétitivité de l’industrie française)’, 일명 ‘경쟁력에 관한 갈로아 보고서(Rapport Gallois sur la compétitivité)’로 불리는 문서가 공개됐다. 74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루이 갈로아* 위원은 노동, 고용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육, 사회적 대화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22가지

의 정책을 국무총리에게 제시했다.

그중 핵심적인 것으로 꼽히는 것이, 300억 유로(한화 약 44조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한 ‘경쟁력 충격’ 제안이다. 그가 제시한 300억 유로 감세는, 200억 유로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회보장분담금 축소와 100억 유로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세금 감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루이 갈로아(Louis Gallois)는 SNCF(프랑스철도청) 청장과 EADS(European Aeronautic Defence and Space Company, 유럽항공방위산업체)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 자문기구의 투자위원에 임명된 고위공무원이다. 지난 5월 31일부로 EADS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자, 애로(Jean-Marc Ayrault) 정부는 6월 6일, 국무총리 산하에 ‘미래투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투자 자문단의 총책임자로 루이 갈로아를 임명했다. 동시에 국무총리는 그에게 프랑스 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 작성의 임무를 부여했다.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근로자 감세의 경우, 저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3.5배 이하의 임금(약 4,990 유로, 한화로는 월 임금 약 7백만 원)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회보장기금의 마련을 위해, CSG(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확장된 사회보장분담금)를 증대하여 200억~220억 유로를 총당하고, 감소 세율의 적용을 받는 몇몇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50억~60억 유로를, 반(反)공해세, 금융거래세, 부동산세, 그리고 조세감면 및 기피 행위(niches fiscales)에 대한 과세를 통해 20억~30억 유로를 보

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고용안정화를 위한 협상' 분야에서 부분실업(경기 악화 시 일시적 휴직) 시행을 강조했으며, 이를 '새로운 유연성'이라고 표현했다. 일자리와 근로자의 능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이러한 유연성은 비정규직(계약직 및 간접고용)의 사용 자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출처: 1. Le Monde, 2012년 12월 5일자, 'Les mesures phare du rapport Gallois'
- 2. 보고서 원문: Louis Gallois(2012), «Pacte pour la compétitivité de l'industrie française»

아시아

일본 : 2012년 9월 유효구인배율 3년 만에 악화, 부흥 수요에 의해 견조했던 지진 피해지에도 그림자

10월 30일 발표된 9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0.81배로 지난달에 비해 0.02포인트 낮아졌다. 유효구인배율이 악화된 것은 3년 2개월 만이다. 자동차와 전기 등 고용창출이 많은 제조업의 부진이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흥 수요로 인해 빠르게 고용이 회복된 지진 피해지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은 2008년 9월 리먼쇼크 이후 고용정세 악화로 2009년 7월에는 과거 최저 수준인 0.43배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단, 기업의 구인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낙관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9월 신규구인 수(계절조정치)는 6월부터 4개월 연속해서 감소하였다.

한편 최근 감소하고 있던 신규구직 신청건수가 9월에는 증가하여 전월보다 6.1% 증가하였다. 구인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가 증가하면 유효구인배율은 악화된다. 주요 산업 중에서 신규구인 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제조업이다. 제조업의 신규구인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4개월 연속해서 감소하였다. 9월에는 11.3%나 줄었으며, 특히 자동차 등 운송용 기계기구 부분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 자동차산업은 작년 여름부터 빠르게 생산량을 회복

하였고, 고용도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신규구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는 작년 여름 생산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을 확대한 데에 대한 반동과 9월 에코카 보조금 종료에 의한 생산 축소를 들 수 있다.

자동차산업의 고용이 축소하고 있는 것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중·일 관계의 악화가 자동차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감소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9월 제조업의 취업자 수(계절조정치)는 3개월 연속해서 감소한 1,005만 명으로, 1,600만 명 정도 근무하던 1990년대 초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5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소매업 등 지금까지 견조하였던 내수산업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도소매업의 취업자 수(계절조정치)도 전월에 비해 11만 명 감소하였다. 신규구인 수는 전년 동월을 상회하고 있지만 그 폭은 2개월 연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부흥 수요에 의해 견조했던 피해지의 고용정세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야기, 후쿠시마, 이와테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유효구인 수는 올 5~6월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감소하기 시작하



였으며, 9월에는 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유효구인
배율이 전월을 밑돌았다.

후쿠시마의 유효구인배율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력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와 전기산업의 구인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노동국의 담당자는 건설과 속
박업 등 복구·부흥 관련 구인이 많이 있어 유효구

인배율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망하고 있
지만 제조업에 정사원으로 취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 출처: 아사히신문 조간 7페이지, 2012년 10월 31
일자, ‘製造業失速、雇用直撃 9月求人倍率、
3年ぶり悪化 復興需要の被災地も陰り’

일본 : 최대 산별연맹 UA젠센동맹(조합원 약 141만 명) 탄생

2012년 11월 6일 일본 최대 산별연맹으로서 UA
젠센동맹이 탄생하였다. UA젠센동맹은 구 UI젠센
동맹과 JSD(일본서비스·유통노조연합)이 통합하
여 결성되었다.

새로 태어난 UA젠센동맹의 조직을 보면, 제조
산업부문, 유통부문, 그리고 종합서비스 부문 등 3
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밑에 섬유·의료, 의
약·화장품, 화학·에너지, 요업·건설자재, 식품,
유통, 인쇄, 레저서비스, 복지·의료산업 등 다양한
부회를 두고 있다.

동맹의 기업별노조는 2,478개 노조를 포함하며,
조합원은 141만 2,674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42.2%, 여성 57.8%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으며,
비정규직은 50.1%로 정규직 49.9%보다 더 많았다.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산별연맹은 극히 드물다.

동맹은 운동의 기초로서 첫째, 사회의 진보와 발
전, 둘째, 산업민주주의와 참가형 노사관계의 진전,

셋째, 생활자 우선의 정치체제 실현, 넷째, 세계의 평
화와 번영 실현, 다섯째, 우애와 연대의 정신이 넘치
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운동의 기본 방침으로 미조직근로자의 조직
화와 산별연맹 미가맹 노조의 가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복합적인 산업 및 업종, 또한 다양한 취업
계층으로 구성되는 복합산별연맹을 추구한다고 밝
혔다. 2013~2014년도 운동방침으로는 조직확대를
목표로 매년 신규노조 조직화를 통해 2만 5천 명, 파
트타임 근로자, 중간관리직, 재고용 근로자(정년퇴
직자)의 조직화를 통해 2만 5천 명, 모두 5만 명을
조직화하여 조합원 150만 명의 산별연맹을 실현하
기로 결정하였다.

- 출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홈페이지,
2012년 11월 9일자, ‘日本最大の産別
「UAゼンセン」が誕生’

일본 : 공·사립 보육원의 85.9%가 비정규직 보육교사 고용

비정규직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보육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보육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도 전국의 공립 및 사립 보육원 중 비정규직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보육원이 85.9%에 달하였다. 비정규직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공립 보육원의 경우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 보육교사로, 사립 보육원에 비해 비정규직 보육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육교사의 비율을 늘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육아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불안정 근로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처럼 비정규직 보육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새벽과 야간을 포함한 장시간 보육 등 보호자의 요구가 다양해진 점을 들 수 있는데, 보육원의 다양해진 보호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 파트타임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육협회의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올 2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전국의 인가보육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205개 시설이 응답하였다. 비정규직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공·사

립 보육원은 2006년도 조사 때보다 8.2%포인트 증가하였다. 근무하는 보육원 중 비정규 고용이 70% 이상이라고 응답한 보육원은 전체의 9.4%로 2006년도 조사에 비해 4.5%포인트 증가하였다. 공립에만 한정하면 6.4%포인트 증가한 12.7%에 달하였다.

보육교사 중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비율은 평균 45.6%로 2006년도 조사에 비해 4.0%포인트 증가하였다. 공사립별로 보면 공립은 53.5%로 사립의 38.9%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증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연장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원은 2006년도 조사보다 9.8%포인트 증가한 70.5%로 나타났으며, 병에 걸린 어린이 및 회복 중인 어린이를 위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원의 비율도 8.3%로 4.5%포인트 증가하였다. 협회회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데에 비해 임금이 충분히 지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일본경제신문 석간 8페이지, 2012년 11월 10일자, 'パート保育士、8割で雇用、昨年度、全国の保育所、公立、2人に1人.'



중국 : 베이징시, 장애인 고용 시 고용업체에 최대 1만 1천 위안의 장려금 지급 계획

2012년 11월 10일 이후 베이징시 고용업체에서 베이징시 호구를 소유한 장애인 직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고정제 노동계약의 경우 1인당 매년 3,000위안(한화 약 55만원) 혹은 비고정제 노동계약의 경우 5,000위안(한화 약 92만원)을 취업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장애인 직원이 전체 직원 수의 1.7%를 상회하는 고용업체가 장애인 취업을 위해 의무고용제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매년 6,000위안(한화 약 11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면 장애인 직원 1인당 최대 1만 1천 위안을 정부 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012년 11월 9일 베이징시 장애인연합회, 재정국, 민정국,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등은 공동으로 「베이징시 고용업체 장애인 취업 보조금과 의무고용제 장려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여, 고용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명시하고, 정부가 장애인 취업 보장금 형식으로 매년 취업 보조금과 의무고용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2년 11월 10일 베이징시 취업연령 장애인(남자 16~60세, 여자 16~50세)은 총 21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이미 취업한 장애인은 총 12만 2천여 명에 이른다. 주지엔민(朱建民) 베이징시 장애인연합회 교육취업부 주임은 새로운 정책 실시 이후 매년 베이징시 장애인 보장금으로 1억 5천만 위안(한화 약 277억 원)이 지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고용업체에서 베이징시의 호구를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비록 관련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고용의무제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조건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 위, 민간기업 등 각종 고용업체는 장애인과 노동계약을 1년(혹은 1년 이상)간 맺고 장애인 직원을 위해 확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며, 실제적으로 1년 이상 일하고, 베이징시 최저임금 이상의 합법적 노동보험을 지불하며 장애인 직원을 위해 제때 충분히 기본사회보험료를 지불할 경우, 소재한 구 및 현 장애인연합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업보조금과 의무고용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관련 소식

지적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최고 1인당 4만 위안(한화 약 738만 원)을 보조받는다.

베이징시 장애인연합회는 「베이징시 장애인 집중 취업 실시 의견」을 발표하여 집중적으로 장애인 취업을 조치하였는데, 주로 복지기업을 설립하거나 취업장려금 방안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베이징시 장애인연합회는 재정부, 민정부와 공동으로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사용하여 전년도 취업보장 징수기준에 따라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보험료를 되돌려 주거나 의무고용제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등은 매년 최고 1인당 4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베이징시 장애인 집중 취업 실시 의견」은 사회보험 보조금 등 5가지 측면에서 복지기업이 위주가 된 장애인 집중 배치가 높은 장려금을 지급한

다. 만약 기업이 장애인 취업을 위해 매년 기본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면, 정부는 그중 50%를 보조금으로 되돌려 줄 계획이다.

• 출처: 光明网, 2012년 11월 10일자, ‘北京鼓励用人单位招残疾职工就业 最高奖1.1万’

중국 : 정부, 독점업종의 임금통제 강화

지난 11월 8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대 대회에서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은 당 18대 보고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소득분배제도의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혁이 민생 개선과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고 공평을 중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소득분배 개혁에 있어 핵심은 무엇이며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는지에 대해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사회발전연구소 양이용(杨宜勇) 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양이용 소장은 국민이 소득분배 개혁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 문제가 국민들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농민 1인당 평균 순소득인 2,300위안(한화 약 42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 말 현재 전체 농촌인구의 13.4%에 해당하는 약 1억 2,800만 명이 빈곤구제 대상이며, 도시의 중·저소득 계층도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큰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

들은 국가가 소득분배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배움이 있는 곳에 교육이, 노동이 있는 곳에 소득이, 질병이 있는 곳에 병원이, 노인이 있는 곳에 양로시설이, 거주자가 있는 곳에 주택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1차 분배와 재분배는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고려하고, 재분배는 공평을 더 중시한다”에 대해 그는 소득분배의 개혁은 공평과 효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효율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사회공평과 정의를 더 증진해야 하며, 공평과 효율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중국의 소득격차가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경계선을 넘은 상황에서 재분배는 공평을 더 중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민생 영역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도농 간의 공공서비스 일체화와 균등화를 추진할 것이고, 대졸자, 농촌이동노동력(농민공) 및 도시 취업관련 계층을 중점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 더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사회보장 체계를 한층 더 완비하고, 임금의 정상적인 인상기제를 건립하며, 최저임금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가는 독점업종의 임금총액과 임금수준에 대한 이중 통제를 강화하고, 국유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임원의 임금관리를 엄격하게 규범화하여, 소득분배를 규범화하고 투명도를 높일 것이며, 동시에 세수의 소득격차에 대한 조절력을 확대하여, 중·저소득자의 세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 개혁의 핵심과 고층에 대해 그는 핵심은 소득격차를 어떻게 축소시키느냐 하

는 점인데 이 가운데 저소득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중위소득자를 확대하는 것이 개혁의 초석이며, 고소득자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의의라고 밝혔다. 고층은 사회분배관계를 어떻게 바로잡느냐 하는 점인데, 특히 어떻게 규제를 강화하여 독점기업과 비독점기업의 소득분배관계를 바로잡고, 도시화 추진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분배관계를 바로잡으며, 임금·단체협상을 추진하여 자본가, 사용자층과 일반 종업원의 소득분배관계를 바로잡느냐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 출처: 新京報, 2012년 11월 10일자, ‘垄断行业工资国家还会加强调控’